중앙교섭속보

2026-
7호

발행일 2026년 6월 9일(화) ❙ **발행인** 박상만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사측 3차 제시안 AI 범위 축소 …금속노조 "수용 불가"

9일 7차 중앙교섭 … 최저임금 · 정년연장은 여전히 미제출, AI 범위마저 축소해 노조 요구안 취지 왜곡

사용자 측이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정년연장은 외면한 채 '노사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조항을 삭제한 2차 제시안을 그대로 고수했다. 특히 사측이 이번 교섭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인공지능(AI) 관련 제시안은 인공지능(AI) 적용 범위를 제한해 노조 요구안 취지를 왜곡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일 오후 대구 대동지회 회의실에서 7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 측은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와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에 대한 3차 제시안을 전달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정년연장 관련 요구안은 이번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인공지능(AI) 관련 제시안 명칭을 '인공지능(AI) 도입 시 활용에 관한 원칙'으로 바꾸고 '고영향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범주를 제한했다. 공정 자동화 설비, 생산 · 물류 관리 시스템, 일반적인 공정 제어 알고리즘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은 인공지능(AI)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노조 인공지능(AI) 관련 요구안 2항 '인공지능(AI) 도입이 조합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노사 합동으로 사전 평가한 뒤 고용보장, 교육훈련, 노동안전,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도입'을 '실무적 사항 협의 후 진행'으로 수정했다.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 제시안은 인공지능(AI) 범주를 축소해 노조 요구안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측의 제시안은 인공지능(AI) 도입을 핑계로 오히려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고용 합의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교섭의 핵심 쟁점이었던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3항 '노사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삭제 의견을 그대로 고수했다. 4항은 "정부는 위 요구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금속 노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한다"라는 문구로 변경해 제출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초기업 교섭은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이나 완성차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인공지능(AI) 범위가 명확해져야 요구안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3항 거버넌스의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 부담스럽다"며 "실무적으로 가능한 거버넌스 범위 확인 후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정부 정책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책 수립ㅇ시행 시 금속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것이 노조 요구안 3항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장세은 노조 대구지부장은 "6차 교섭에서 3항 삭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사용자 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기 교섭에선 실질적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사 대정부 요구안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사업이다. 사측이 7차 교섭에서까지 딴소리를 하며 노조 요구안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차기 교섭에는 정말로 진전된 안을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사용자 측 내부적으로는 산별교섭 활성화 관련 요구를 수용에 대해 비판도 많이 나와 어려운 상황이다"며 "노조의 평가가 이해는 되지만, 사용자 측 제시안의 진정성이 저평가되는 듯해 아쉽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8차 중앙교섭을 16일 오후 대전 모임공간국보에서 연다.